# 전남도, 735억 투입 귀농어귀촌 유치 정책 추진

**임시 주거 마련·농촌 정보 제공**
**농어촌 문화 체험·창업자금 지원**
**귀농인 선호 사업 저금리 대출도**
**화합 프로그램 등 총 11개 사업**

전남도가 올해 귀농어·귀촌 분야 11개 핵심 사업에 735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청년층 농업 창업 촉진과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차별화된 전남형 귀농어귀촌 유치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중점 추진할 핵심 사업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 농촌(전남)에서 살아보기 지원,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지원, 귀어인의 집 조성 지원 등 11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농촌 이주 희망 도시민의 임시 주거 공간 마련과 농촌 정보 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에 49억원을 투입한다. 현장에서 귀농귀촌 유치활동과 함께 정착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예비·초보 귀농어귀촌인의 농어촌 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돕고, 마을 주민 스스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2억원을 지원한다.

'귀농 창업자금·주택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농지구입 등 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자금은 7500만원까지 연 1.5%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매년 귀농인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다.

또 신규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 전남도 귀농어귀촌인에게 우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금으로 팀당 3000만원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8억원이다.

여기에 도시민 귀농어귀촌인 유입 캠페인·어울림 마을 조성·어울림 대회 등 귀농어귀촌 유치활동과 지역민과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10억원을 지원한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귀농어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4만여 명의 귀농어귀촌인이 전남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올해는 보다 체계적인 귀농어귀촌 유치 지원정책을 통해 예비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 전남도, 나주 이전 공공기관과 상생협력 강화

**16개 공공기관장·한전공대 총장**

전남도는 1일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발전과 혁신도시의 명품화를 위해 상상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이전 공공기관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총장 등 25명이 참석해 상생협력사업 추진과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논의했다.

전남도는 10개의 상생협력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전남 정보보안 클러스터 구축 △정부 전력반도체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력망 조기 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해 이전 공공기관과 발맞춰 나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조기 추진 △전남도 메가 이벤트 참여 및 홍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스템 지속 운영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등 4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논의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전 공공기관에선 △나주 에너지밸리 마이크로그리드 시범도시 구현 △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지역 자원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등 3개의 사항에 대해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전 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상생 협력체계를 확고히 다져 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서 세계 속으로 힘차게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을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3년간 3조1000억원을 구매하고 있다.

최황지 기자

**전남 공공 교육정보서비스 클라우드 전환 업무협약**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왼쪽부터),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일 전남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전남 공공 교육정보서비스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광주시,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결정

**'새청무' '강대찬' 2개 선정**
**종자보급 원활·밥맛 우수**

광주시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새청무', '강대찬'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관련 기관과 농민회, 농업경영인 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 품종을 결정했다.

'새청무'와 '강대찬' 품종은 종자보급이 원활하고 병충해에 강하며 밥맛이 우수하다.

2020~2023년 지역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신동진·새청무 등 2개 품종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에 '신동진'을 제한하면서 '강대찬' 품종을 대체 품종으로 결정했다.

남택송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지역 기후와 토양에 맞는 우수한 품종이 결정된 만큼 매입품종 종자 확보와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결과, 재배상 유의사항,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변경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 광주시, 설 명절기간 노로바이러스 급증

**장염 등 내원 환자 121건 중 66%**

광주지역에서 설 명절 기간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의료기관에 설사·구토 등 장염으로 내원한 환자 검체 121건의 원인 병원체를 분석한 결과, 66%가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장염으로 확인됐다.

이는 장염환자 검체에서 원인 병원체인 노로바이러스의 검출률이 1월 초 44%보다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설 명절 직후 검출률 28%에 비해서도 높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개인위생 관리가 미숙한 영유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 병원체 중 하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은 2~3일간 지속된 후 호전되지만, 영유아·노인·면역저하자 등에서 탈수 증상만으로도 위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정미 수인성질환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만큼, 감염 예방을 위해선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 확산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지 기자

# '가뭄 극복' 광주 시민들이 나선다

**시·자원봉사센터·전남대 총학 등**
**상가·가정 방문 수압조정 안내**

계속된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자 광주시민들이 직접 물 절약 홍보에 나섰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노인일자리 협동조합과 협업해 물 절약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광주시·유관기관 홈페이지, 안전 문자 발송, 대 시민 캠페인 등을 통해 물 절약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수돗물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저수조 청소 유예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했다. 광주시의 물 절약 참여 호소에도 불구하고 절수율은 지난해 말 최대 8.9%를 기록했다가 1월 들어 5~6%대로 떨어졌고,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지역 기관·단체들은 자발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에 동참하기로 했다.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일부터, 노인일자리 협동조합은 13일부터 절수 참여율이 낮은 상가와 가정 등을 방문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수압조정방법을 안내하는 등 오프라인 위주의 물 절약 홍보를 전개한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교내 화장실, 기숙사 등 시설물의 수압을 조정한다.

6일부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보영상 등을 공유하고 '물 절약 챌린지'를 실시하는 등 온라인 위주의 캠페인에 들어간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지역 다른 대학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물 절약 캠페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이 직접 물 절약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관심도와 참여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물 절약 홍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감사하다"며 "아직도 제한급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계량기 수도밸브 조절을 통한 수압저감, 설거지통을 이용한 설거지, 샤워시간 줄이기 등 일상 속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 광주시, 겨울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올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광주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계절관리기간인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올해 첫시행되면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사전 관리 강화에 따른 조치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돼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으나, 올해 12월부터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계절관리 기간에도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올해 12월부터 광주 전역에서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속은 광주시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실시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이정신 대기보전과장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26㎍/㎥에서 지난해 17㎍/㎥으로 35% 이상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시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등 지원사업을 통한 저공해조치와 운행 제한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위해 올해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가격의 90%, 조기폐차 시에는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상지 기자